

주간 통일정세

2016-41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0.8	北, 국제규정 부합되게 우주정복 활로 열겠다...위성발사 시사(연합뉴스)
		北신문, 처참한 함북 수해 상황 체제 선전에 이용(연합뉴스)
	10.9	北 '나홀에 한 번꼴' 국제행사...“제재 ㄱ떡없다” 선전용(연합뉴스)
		北, 여러나라서 정권수립 축전 보내와...시진핑은 없어(연합뉴스)
	10.10	北김정은, 전국 고아 교육시설에 솜옷·운동복 선물(연합뉴스)
		北, 당 창건기념일 맞아 각지서 경축공연 개최(연합뉴스)
		北, 김일성경기장 보수 개선 공사 마치고 준공식(연합뉴스)
		北 “제재로 지속가능 개발목표 이행 방해받아” 궤변(연합뉴스)
		北 당 창건일 ‘차분한 분위기’...김정은 참배 보도 없어(연합뉴스)
	北, 당창건일에 ‘김정은 유일영도·인민제일주의 강조(연합뉴스)	
	10.11	北, 내년 8월 백두산·평양서 ‘3부자 우상화’ 국제 대회(연합뉴스)
		北, 내년 1월 김정은 생일 성대히 경축...국경일 지정하나(연합뉴스)
		北, 베트남에 IT 인력 파견 제안(연합뉴스)
	10.12	통일부, 北 궁석웅 외무성 부상 숙청설 파악 중(연합뉴스)
‘숙청설’ 北 궁석웅, 4년 연속 참석한 행사 올해엔 불참(연합뉴스)		
北, 내년 광명성절 피겨대회 참가 외국선수단 ‘전폭지원’(연합뉴스)		
10.14	北 김정은, 함북 수해 현장에 최룡해 내세워(연합뉴스)	
	北 김정은 수해현장 방문하나...北매체, 뜬금없이 작년 시찰 보도(연합뉴스)	
경제	10.8	北 국영기업 “스위스·브라질과 합작” 홍보 1년 만에 ‘삭제’(연합뉴스)
		美매체, 북한 선박 50여척 탄자니아로 국적세탁(연합뉴스)
	10.11	20여년만에 재가동된 北청수화학, 군용 배터리 생산(연합뉴스)
	10.12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 증가, 가격도 1t당 20달러 급등(연합뉴스)
	10.13	中, 대북제재에도 北서 철광석 수입 늘어(연합뉴스)
	10.14	美전문가, 북·중 철광석 교역 안보리 제재결의 후에도 여전(연합뉴스)
中, 북중 허룽경제합작구 조성 박차...국제사회 대북제재 ‘역행’(연합뉴스)		
北, 동해 조업권 대만에도 팔아...300t급 어선 수십척 조업중(연합뉴스)		
사회 문화	10.14	北당국, 국토국 관료 20여명 체포...홍수피해 책임 전가(연합뉴스)

외교 국방	10.8	北매체 “美 B-1B, 6~7일 한반도와 주변상공 비행” 주장(연합뉴스)
		美 CSIS “北 도발 시점, 美 선거와 점점 가까워져”(연합뉴스)
		김원수 유엔차장 “北도발 막되, 장래 위해 北에 문 열어둬야”(연합뉴스)
		北, ‘풍계·동창리·무수단’ 동시다발 징후…뮐 노리나(연합뉴스)
	10.9	美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한국 출동…北도발 응징 의지(연합뉴스)
		파워 대사, 일부 국가 대북제재 예의악용…北외화확득 차단(연합뉴스)
		美38노스, 北로켓발사장 주변서도 활동…엔진시험장 철저 은폐(연합뉴스)
		美랜드연구소, 北 2020년 핵무기 50~100개 보유(연합뉴스)
	10.10	중국, 北노동당 창건기념일 맞아 ‘축전’ 보내(연합뉴스)
		김장수 대사 “中, 北 5차핵실험 사전통보 못 받았다는 입장”(연합뉴스)
	10.11	北 매체, 파워 美대사 방한 행보에 “도발적 망동” 비난(연합뉴스)
		北, ‘일본 독자제재 강화에 단호 대응’ 의사 밝혀(연합뉴스)
		아베, 日 EEZ 떨어진 ‘北 탄도미사일’ 잔해 회수 검토(연합뉴스)
	10.12	러셀 美차관보, 안보리 대북제재에 중대 진전 있을것 확신(연합뉴스)
		前 주한미군사령관들, 北공격 근접시 자위적 선제타격 가능(연합뉴스)
		美전문가 “北, 5차핵실험 직전 中·러에 통보한듯”(연합뉴스)
		美, 北 ‘자금지원 금지’ 재지정…인신매매 방지 소홀(연합뉴스)
		北, 조러 친선확대 흔들림없는 의지…수교 68주년(연합뉴스)
		네덜란드, 폐업한 北식당에 8천만원 벌금 징수(연합뉴스)
		캐나다·북한 외교장관 7월 아세안 회의서 ‘북도 접촉’(연합뉴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대북제재 행정명령 며칠내 내릴것(연합뉴스)		
10.13	美국무부 “北 관광수익, 핵개발 전용 가능성 커”(연합뉴스)	
	킹 美특사, 김정은 제재로 北주민 지도자 존엄에 의문 가질 것(연합뉴스)	
	北 외무부상, 러시아와 우호 관계 어떤 변화에도 지속될 것(연합뉴스)	
	탄자니아, 자국 깃발 단 北선박 13척 등록 취소(연합뉴스)	
10.14	러셀 美차관보, 김정은 핵공격 능력 가질수 있지만 바로 죽는다(연합뉴스)	
	美 당국자들 대북발언 점점 강경해져…선제타격 복선 깔았나(연합뉴스)	
	日, 소말리아 파견 함정 줄여서 동해서 대북 경제·감시 활용(연합뉴스)	
	벨라루스, 대북제재 결의 위반 계좌 동결…첫 사례(연합뉴스)	
	조원진, 北에 소규모 인공지진 연평균 42회…매년 증가(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10. 10.

■ 北김정은, 전국 고아 교육시설에 솜옷·운동복 선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고아들을 위한 교육시설인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중등학교에 선물을 전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0일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원아들에게 솜옷, 운동복, 신발 등을 선물로 보내시었다”고 밝힘.
- 북한은 올해 들어 전국 각지에 이들 교육시설 건설을 추진하며 김정은의 ‘어린이 사랑’을 부각해 왔음.

2016. 10. 14.

■ 北 김정은, 함북 수해 현장에 최룡해 내세워(연합뉴스)

-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큰 피해가 난 함경북도 지역을 방문, 피해 복구를 독려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14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이달 초에 최룡해가 (함경북도) 회령시를 비롯한 다른 수해 지역을 돌아보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만나지도 않고 해당 간부들을 만나 여러 가지 지적만 하고 돌아갔다”고 전함.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변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이 지역을 시찰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최룡해를 내세운 것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10. 12.

■ 통일부, 北 궁석웅 외무성 부상 숙청설 파악 중(연합뉴스)

- 통일부는 12일 궁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 숙청설에 대해 “지금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힘.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에 화난 김정은이 궁석웅 부상을 숙청(핵

명화 교육)했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이같이 밝히고 “확인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다”고 말함.

- 정 대변인은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10명이 한꺼번에 탈출했다는 다른 언론의 전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힘.

■ ‘숙청설’ 北 공석웅, 4년 연속 참석한 행사 올해엔 불참(연합뉴스)

- 숙청설이 제기된 공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이 지난 4년간 연속으로 참석한 행사에 올해는 불참한 것으로 확인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과 러시아의 수교 68주년을 맞아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12일 대동강외교단 회관에서 마련한 연회에 신흥철 외무성 부상, 오룡철 대외경제성 부상, 서호원 조선러시아친선협회 위원장 등이 초대됐다고 보도함.

다. 공식행사

2016. 10. 10.

■ 北, 당 창건기념일 맞아 각지서 경축공연 개최(연합뉴스)

-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1주년 기념일을 맞아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공연을 열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모란봉극장, 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 국립연극극장, 평양교예극장, 요술극장, 개성광장 등지에서 공연이 진행됐다고 보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동평양대극장에서 ‘청춘의 자서전’ 공연을 관람했으며, 청년·학생들의 무도회도 전역에서 펼쳐졌다고 통신은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10. 9.

■ 北 ‘나홀에 한 번꼴’ 국제행사..“제재 끄떡없다” 선전용(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최근 한 달 동안 나홀에 한 번꼴로 빈번하게 국제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분석됨.
- 연합뉴스가 지난달 8일 이후 30일 동안 북한 매체의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국토환경보호성과 농업성, 도시 경영성, 국가관광총국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지속적 발전에 관한 평양 국제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행사에는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종합대학 박경애 교수와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인디아, 영국의 전문가, 북한주재 각국의 외교사절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전함.

2016. 10. 10.

■ **北, 김일성경기장 보수 개선 공사 마치고 준공식(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경기장의 보수 개선 공사를 마치고 9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경기장에는 4만여 석의 관람석과 새로운 인공 잔디를 입힌 축구장, 선수 입장홀 그리고 국제축구연맹(FIFA) 사무실과 심판원실, 감독실, 기자회견실, 약물 검사실, 치료실, 과학기술보급실을 비롯한 현대적인 체육 및 문화후생 시설들과 봉사망들까지 갖추어져 있다”고 밝힘.
- 준공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와 최룡해·김기남·최태복·리수용·김평해·리만건·오수용·곽범기·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와 김수길 평양시 당 위원장 등이 참석함.

2016. 10. 11.

■ **北, 내년 8월 백두산 평양서 ‘3부자 우상화’ 국제 대회(연합뉴스)**

- 북한이 ‘백두혈통’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를 찬양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 행사를 내년 8월 백두산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국제적 회합인 2017년 백두산위인 칭송대회를 김일성 주석 각하의 조국해방 업적과 김정일 각하의 선군령도(영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다음해(내년) 8월에 조선의 백두산과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힘.
-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핵개발에 따른 고립을 탈피하고, ‘백두혈통 계승자’인 김정은 체제가 완성됐음을 대외적으로 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北, 내년 1월 김정은 생일 성대히 경축…국경일 지정하나(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33번째 생일이자 집권 6년차인 내년 1월 8일을 기점으로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를 본격화할 조짐이 포착돼 주목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를 찬양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인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내년 8월 백두산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해 1월 김정은 각하의 탄생일을 성대히 경축하며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2월 16일)과 태양절(김일성 생일, 4월 15일)에 이어 김정숙 여사의 탄생일(12월 24일)을 맞는 12월까지 다채로운 정치문화활동들을 활발히 벌려 2017년 온 한해를 경축 분위기로 끌어받치게 하자”고 제안함.

■ 北, 베트남에 IT 인력 파견 제안(연합뉴스)

-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근로자 파견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베트남에 정보기술(IT) 인력 파견을 제안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함.
- 방송은 이날 베트남 정보통신부 자료 등을 인용해 “김명길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4일 홍 누위인 탕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차관을 만나 양국 간 정보통신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면서 “북한이 옛 사회주의 형제국인 베트남과 IT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밝힘.
- 이에 홍 차관은 “북한이 베트남 사회 각 분야 발전에 도움을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양국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방송은 전함.

2016. 10. 12.

■ 北, 내년 광명성절 피겨대회 참가 외국선수단 ‘전폭지원’(연합뉴스)

- 북한이 내년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2월 16일)을 맞아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피겨대회를 앞두고 외국선수단 전폭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냄.
- 12일 ‘조선체육’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빙상협회는 제25차 광명성절 기념 백두산상 국제 휘거축전(피겨축제)을 내년 2월 15~17일 평양에서 개최함.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일 생일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인 데다가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전방위로 이뤄지는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제재가 큰 효력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10. 8.

■ 北, 국제규정 부합되게 우주정복 활로 열겠다…위성발사 시사(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10일)을 계기로 장거리미사일(로켓) 발사 준비 징후를 보이는 가운데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냄.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조선(북한) 대표가 지난 6일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에서 연설하였다”면서 “10대 우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국제적 규정과 관례에 부합되게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광활한 우주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고 확인하였다”고 보도함.
- 이와 함께 북한 대표는 핵실험 등 잇단 도발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궤변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늘어놓음. 그는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로선”이라며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北신문, 처참한 함북 수해 상황 체제 선전에 이용(연합뉴스)

- 북한이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처참한 홍수피해 때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화를 지키려다가 숨진 사람들을 띄우며 체제 선전에 이용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4면 전체를 할애한 ‘정론’을 통해 김 씨 부자의 초상화를 지키려다가 숨진 김종길 씨 등의 사례를 소개함.
- 북한 당국은 홍수나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김부자 초상화를 보호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영웅으로 치켜세우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정치적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전해짐.

2016. 10. 9.

■ 北, 여러나라서 정권수립 축전 보내와…시진핑은 없어(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정권수립 68주년(9.9절)을 기념해 축전을 보낸 각국 인사들의 명단을 9일 공개했으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며 축전을 보낸 각국 고위 인사의 직함을 나열함.
- 이는 2014년과 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6개와 15개 나라가 줄어든 것이라고 VOA는 설명함.

2016. 10. 10.

■ 北 “제재로 지속가능 개발목표 이행 방해받아” 궤변(연합뉴스)

- 북한이 특정 국가들의 경제제재로 인해 국제사회의 새 개발목표인 ‘2030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를 이행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제71차 유엔총회 2위원회(경제·개발 담당)에서 자국

대표가 지난 4일 이같이 연설한 내용을 10일 보도함.

- 북한이 지속가능개발목표를 구실로 자국에 가해지는 경제제재를 비난한 것은 보편적인 국제 현안에 호소하며 핵개발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됨.

■ 北 당 창건일 ‘차분한’ 분위기…김정은 참배 보도 없어(연합뉴스)

-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71주년을 맞은 10일 오전까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행보와 관련한 특별한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김정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관련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음.
- 통상 기념일 전날 열리는 중앙보고대회 관련 소식도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기념일 당일 개최되는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북한 언론매체들은 밝히지 않고 있음.

■ 北, 당창건일에 ‘김정은 유일영도·인민제일주의’ 강조(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창건 71주년인 1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유일 영도’를 중심으로 한 혁명적 규율과 질서 확립을 강조함.
- 신문은 이날 ‘조선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인민의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 세울것이다’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당 중앙의 유일적 령도(영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같은 날 3면 논설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는 우리 당의 일관한 령도원칙’에서는 군력 강화가 ‘국사중의 국사’라며 “당의 령도는 혁명무력 강화 발전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함.

2016. 10. 14.

■ 北 김정은 수해현장 방문하나…北매체, 뜬금없이 작년 시찰 보도(연합뉴스)

- 최근 일주일가량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함경북도 수해 현장을 곧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 북한 조선중앙TV는 13일 오후 김정은이 지난해 9월과 10월 함경북도 나선시 수해 복구 현장을 시찰한 것을 찬양하는 보도와 함께 주민 인터뷰를 방영함.
- 중앙TV는 “군민 대단결의 위력에 의해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된 라선(나선)시 선봉지구 만복동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이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의 애민헌신의 노고를 가슴 뜨겁게 돌려켜보고 있다”고 전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6. 10. 11.

■ 20여년만에 재가동된 北청수화학, 군용 배터리 생산(연합뉴스)

- 북한 압록강 변에 20년 넘게 방치됐다가 최근 새로 단장한 청수화학공장이 군용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RFA에 “(평안북도 식주군 청수로동지구에 있는) 청수화학공장은 과거에 생산하던 카바이드 생산을 계속하지만, 탱크나 장갑차, 대형 트럭 등 각종 군용 장비에 소요되는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라고 주장함.
- 소식통은 “이미 가동을 시작한 청수화학공장은 군수용 공장이지만 앞으로 생산이 활발해질 경우 민간용 농기구나 자동차용 배터리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임.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10. 8.

■ 北 국영기업 “스위스·브라질과 합작” 홍보 1년 만에 ‘삭제’(연합뉴스)

- 북한의 내각 직속 기업이 1년 전 스위스·브라질 회사들과 합영·합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최근 공지에서는 이런 내용을 빼 배경에 관심이 쏠림.
- 북한 대외선전용 사이트인 '내나라'는 8일 내각 직속 기업인 조선대양총회사가 “중국의 권위 있는 회사들과 조선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 품위(광석에 함유된 금속의 비율)가 높은 몰리브덴 금속광물 제품 생산과 판매에서 합영, 합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반면 이 회사가 지난해 10월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보면 “중국과 스위스, 브라질의 권위 있는 회사들과 조선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 품위가 높은 몰리브덴 금속광물 제품생산과 판매에서 합영, 합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음. 합영·합작 추진 대상으로 중국과 함께 명시됐던 스위스·브라질 회사가 1년 후 공지에서는 빠짐.

■ 美매체, 북한 선박 50여척 탄자니아로 국적세탁(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난 3월 이후 북한이 소유하거나 연계된 선박 50여 척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국적을 바꿨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인 NK뉴스가 8일 보도함.
- NK뉴스는 유럽선박정보시스템과 항만국통제(PSC) 등의 자료를 인용해 “(추적대상 북한 선박 가운데) 15%가 현재 탄자니아 국기를 달고 운항 중”이라며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밝힘.
- 해당 선박들에는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목한 선박들과 미 재무부가 제재대상으로 결정한 선박 1척이 포함됨.

2016. 10. 12.

■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 증가, 가격도 1t당 20달러 급등(연합뉴스)

- 북한의 대(對)중국 석탄수출이 최근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하면서 북한의 탄광 채굴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12일 보도함.
- 평안남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대북 제재로 줄었던 석탄 수출량이 최근 갑자기 늘어나면서 국내 탄광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면서 “석탄 수출은 외화가 빠르게 유통되고 쓸쓸한 돈벌이 수단이라는 점에서 돈주(신흥부유층)들이 몰려들었다”고 밝힘.
-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석탄 수출은 중국 정부의 품질 규제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대북 제재까지 겹쳐 최상품 석탄도 t당 40달러에 소량 수출됐다”면서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현재는 t당 62달러에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말함.

2016. 10. 13.

■ 中, 대북제재에도 北서 철광석 수입 늘어(연합뉴스)

-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착수했지만 북한으로부터의 철광석 수입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VOA는 이날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대북제재에 착수한 지난 4월 이후 5개월간 중국 정부가 지정한 무역 금지 품목의 북중 교역액은 약 4억2천만 달러(4천 717억 원 상당)로, 작년 동기보다 8.1% 감소했다고 보도함.
-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무역 금지 품목을 수입한 금액은 작년 동기보다 7.95% 줄었음. 하지만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 수입액은 작년 동기보다 67%나 증가함.

2016. 10. 14.

■ **美전문가, 북·중 철광석 교역 안보리 제재결의 후에도 여전(연합뉴스)**

-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했다고 알려진 지난 3월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에도 북한 최대의 철광석 산지인 무산광산과 이곳에 인접한 중국 난평 사이의 교역이 여전히 이뤄져 왔다고 미국 전문가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주장함.
- 미국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담당국장은 13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무산광산을 촬영한 사진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힘.
- VOA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2270호 결의 채택 이후인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무역 금지 품목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5% 줄었지만, 북한 철광석의 중국 수출액은 67% 증가했다고 전함.

■ **中, 북중 허룽경제합작구 조성 박차...국제사회 대북제재 '역행'(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북중 접경도시 가운데 3번째로 추진 중인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의 '변경(邊境)경제합작구' 조성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가 보도함.
- 그러나 허룽변경경제합작구 사업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14일 연변일보에 따르면 작년 3월 중국 국무원 비준을 받은 허룽변경경제합작구는 기초시설 건설과 기업유치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경제 발전의 새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北, 동해 조업권 대만에도 팔아...300t급 어선 수십척 조업중(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통치자금 확보 목적으로 동해 조업권을 중국에 이어

- 대만에도 팔아넘긴 것으로 14일 알려짐.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최근 대만에 동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 (EEZ) 내 조업권을 팔았다”며 “300t급 대만 어선 수십 척이 북한 동해에서 조업하고 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북한은 대만 어선 1척이 하루 작업하는데 대만 돈 4만5천달러(한화 160만원)를 받으며, 한정된 구역 내에서 어업을 하도록 허용했다”며 “조업권 판매대금은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10. 14.

■ 北당국, 국토국 관료 20여명 체포…홍수피해 책임 전가(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지난 8월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지역이 홍수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국토환경보호관리국(국토국)의 관료 20여 명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짐.
-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최근 함경북도 국토국의 간부 20여 명이 큰물(홍수) 피해 책임으로 중앙 검열 목적으로 파견된 국가안전보위부(성) 요원들에게 긴급체포됐다”고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번에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피해의 원인을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토사가 주민 거주지역을 덮치고 여러 곳에서 저수지 물이 대량으로 방류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10. 8.

■ **北매체 “美 B-1B, 6~7일 한반도와 주변상공 비행” 주장(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지난 6일과 7일 한반도 주변 상공을 비행했다고 주장함.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은 8일 “미제는 10월 7일 오전 괌도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등지를 들고 있는 핵전략 폭격기 B-1B를 조선반도 주변 상공까지 비행시키면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위협과 공갈을 감행했다”면서 “공화국을 핵 선제타격하기 위한 미제의 무모한 군사적 광기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말함.
- 앞서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지난달 13일과 21일 2차례 B-1B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며 공개적인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음.

■ **美 CSIS “北 도발 시점, 美 선거와 점점 가까워져”(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오는 10일(이하 현지시간)을 맞아 모종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북한의 물리적 도발 시점이 점점 미국의 선거일에 근접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미국 정책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개설한 북한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김정은 정권 들어 이뤄진 도발과 미국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와의 시차가 평균 4주였다고 8일 밝힘.
- 국내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새로운 도발 수단으로 쓸 수 있음을 시사하는 언급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2016. 10. 9.

■ **美핵함모 로널드 레이건호 한국 출동…北도발 응징 의지(연합뉴스)**

-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10일부터 한반도 전 해역에서 시작되는

한미 해군 연합훈련에 참가함.

- 군 관계자는 9일 “한미 해군이 내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서·남해와 동해에서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라는 이름의 연합훈련을 한다”며 “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 전개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주요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보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임.

■ 파워 대사, 일부 국가 대북제재 예외악용…北외화획득 차단(연합뉴스)

-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 3월 채택한 대북 제재에 대해 “일부 국가나 조직이 제재의 예외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9일 보도된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 이행이 더 타격을 줄 것”이라며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논의 중인 제재로 예외 대상을 더 좁혀 빠져나갈 길을 막고 싶다는 뜻을 밝힘.
- 파워 대사는 북한이 광물자원 교역으로 번 자금을 활용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함.

2016. 10. 11.

■ 北 매체, 파워 美대사 방한 행보에 “도발적 망동” 비난(연합뉴스)

-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최근 방한해 탈북민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 방문 등 과격 행보를 한 데 대해 북한 매체가 지속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1일 “지난 9일 유엔주재 미국대사라는 자가 괴뢰 하나원에 나타나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었다”며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용납 못 할 도발적 망동”이라고 주장함.
- 매체는 또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제재와 압박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파워 대사는) 혀바닥질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가를 몸서리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2016. 10. 12.

■ 러셀 美차관보, 안보리 대북제재에 중대 진전 있을것 확신(연합뉴스)

- 북한의 지난달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새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만들어질 대북제재의 강도가 지난 3월의 안보리 제재 때보

- 다 높아질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전망함.
- 러셀 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진전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함. 우리는 분명히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함.
 - 이어 러셀 차관보는 “우리가 (새 대북제재와 관련해) 어디까지 도달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 “나는 대북 제재와 통제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확신한다”고 말함.

■ 前 주한미군사령관들, 北공격 근접시 자위적 선제타격 가능(연합뉴스)

-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최근 미국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 미국 혹은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확실시된다면 선제타격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음이 확인되면 북한의 공격력을 파괴하기 위해 선제타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VOA가 12일 보도함.
- 벨 전 사령관은 “재앙적인 기습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적 권리를 위해서는 그런(선제타격) 권리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함.

■ 美전문가 “北, 5차 핵실험 직전 中·러에 통보한듯”(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직전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도 특사를 보내 핵실험을 계획을 사전 통보했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됨.
- ‘북한 지도부 감시’(North Korea Leadership Watch)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마이클 매든은 11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를 통해 북한이 중국에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장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을 파견했고 러시아에는 윤동현 인민무력성 부상(차관)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동당 국제부 고위관리 한 명을 보내 사전 통보 창구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 이들 중 중국에는 최선희 부국장장이, 러시아에는 윤동현 부상이 핵실험 사전 통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그는 추정함.

■ 美, 北 ‘자금지원 금지’ 재지정…인신매매 방지 소홀(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피해방지를 위해 충실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자금 지원 금지대상으로 재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미국 연방관보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7 회계연도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대상국가에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시리아, 에르트리아 등을 포함했다고 방송은 전함.
- 미 국무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함에 따라 북한은 2003년 이후 14년째 3등급에 포함됨.

2016. 10. 13.

■ **미국무부 “北 관광수익, 핵개발 전용 가능성 커”(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관광수익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3일 보도함.
- 애나 리치-앨런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쓰는 돈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함.
- 리치-앨런 대변인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으며, 종종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한다”고 덧붙였다.

■ **킹 특사, 김정은 제재로 北주민 지도자 존엄에 의문 가질 것(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올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연례 북한인권 결의와 관련해 “분명히 업데이트된(updated) 결의가 될 것”이라고 말함.
-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회의의 ‘사이오 인권포럼’ 참석차 방한한 킹 특사는 13일 포럼이 열린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함.
- 킹 특사는 “결의는 통상 앞선 결의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지난 한 해 진행됐던 상황이 결의에 반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함.

2016. 10. 14.

■ **러셀 차관보, 김정은 핵공격 능력 가질수 있지만 바로 죽는다(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아마도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바로 죽는다”고 말함.
-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 언론 국방담당 기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며 이같이 경고했다고 AP통신이 전함.

-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결의안과 미국 자체 제재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멈추는 데는 실패했음.

■ 美 당국자들 대북발언 점점 강경해져…‘선제타격’ 복선 깔았나(연합뉴스)

- 미국발 대북 메시지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음. 전직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의 입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대북업무 핵심 당국자로부터 ‘핵 도발 시 김정은 제거’를 상정한 발언이 나왔음.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마도(북한이)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그러고 나면 바로 죽는다”고 발언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는 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반응임.
- 이 발언은 ‘김정은이 자기 무덤 파는 격인 핵 공격을 최우선 옵션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해 현직 미국 외교 당국자가 ‘죽는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

나. 북·중 관계

2016. 10. 8.

■ 김원수 유엔차장 “北도발 막되, 장래 위해 北에 문 열어둬야”(연합뉴스)

-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북한이 이들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했을 때의 선택지 제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군축대표가 지적함.
- 김 사무차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국립외교원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 참석,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을 유지하는 게 이같은(북한의) 도전에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과 병행해서 동북아평화협력포럼과 같은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함.
- 이어 그는 “만약 그들(북한)이 경로를 바꾼다면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나 다른(국제)체제를 통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장래를 위해 우리는 북한에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함.

2016. 10. 10.

■ **중국, 北노동당 창건기념일 맞아 ‘축전’ 보내(연합뉴스)**

- 중국이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맞아 축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이는 중국이 연례적으로 해온 데다 우호 친선의 전통을 고려했다고 밝혀 북한과 중국 관계 개선에 별다른 의미는 없어 보임.
- 경황(耿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 관련 축전을 보냈느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우방국이고 양당과 양국은 장기적으로 우호 친선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맞아 중국은 이미 북한에 축전을 보냈다”고 밝힘.
- 중국은 북한 노동당 기념일 축전과 별도로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 등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감을 드러냄.

■ **김장수 대사 “中, 北 5차핵실험 사전통보 못 받았다는 입장”(연합뉴스)**

- 김장수 주중대사는 10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함.
- 김 대사는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주중 대사관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전에 중국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에 관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 “중국은 제4차 핵실험은 전혀 몰랐고 5차 핵실험도 미국이나 중국이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 중국 측의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말함.
- 그는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이 제1~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최소 몇 시간 이전이라도 중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덧붙임.

다. 북·일 관계

2016. 10. 11.

■ **北, ‘일본 독자제재 강화에 단호 대응’ 의사 밝혀(연합뉴스)**

- 북한의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대사는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독자 제재 강화 방침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1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송 대사는 북한을 방문했던 후쿠오카(福岡)현 북일우호협회 간부들과 지난 5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대북제재 강화시)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함.
- 이와 함께 송 대사는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 필요성도 강조했으며, 일본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통신은 덧붙임.

■ **아베, 日 EEZ 떨어진 '北 탄도미사일' 잔해 회수 검토(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북한이 최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잔해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회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기술적으로) 곤란한 점도 있지만,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함.
-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방위상도 “회수가 가능하면 성능 및 제조 기술에 관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2016. 10. 14.

■ **日, 소말리아 파견 함정 줄여서 동해서 대북 경계·감시 활용(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함정 수를 줄여 이를 북한 감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NHK가 14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민간 선박 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2척에서 1척으로 줄일 계획임.
- 방위성은 소말리아 파견 축소로 확보한 선박을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거나 동해 일대에서 경계 활동을 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최종 조율 중임.

라. 북·러 관계

2016. 10. 12.

■ **北, 조러 친선확대 흔들림없는 의지…수교 68주년(연합뉴스)**

- 북한이 12일 러시아와의 수교 68주년을 맞아 양국의 역사적 친선·협조를 강조하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힘.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 좋게 발전하는 조로(북러)친선협조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신고 “조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드팀없는(흔들림없는) 의지”라고 밝힘.
- 노동신문은 “현시기 조로 친선협조 관계는 커다란 생명력을 안고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밀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함.

2016. 10. 13.

■ **北 외무부상, 러시아와 우호 관계 어떤 변화에도 지속될 것(연합뉴스)**

- 북한은 어떤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북한 신홍철 외무성 부상이 12일(현지시간) 밝혔다.
- 타스 통신에 따르면 신 부상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간 수교 68주년을 맞아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대동강외교단 회관에서 마련한 연회에 참석해 연설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 신 부상은 “어떤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앞으로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러시아와 세계 평화 및 안전 보호, 국제적 공정성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10. 12.

■ 네덜란드, 폐업한 北식당에 8천만원 벌금 징수(연합뉴스)

-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 폐업한 암스테르담의 북한 식당(해당화) 주인으로부터 6만4천 유로(한화 8천만원)의 벌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검찰담당 공보관은 북한 식당이 노동허가증이 없는 북한 종업원을 불법 고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렘코 브뢰커 한국학 연구교수는 네덜란드 당국의 벌금 징수 이유에 대해 “(네덜란드) 사회고용부는 해당화 주인이 북한 종업원 8명에게 고용허가 사항 이외의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한 명당 8천유로, 총 6만4천유로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RFA에 말했다.

■ 캐나다-북한 외교장관 7월 아세안 회의서 '북도 접촉'(연합뉴스)

- 지난 7월 캐나다와 북한 간 외교부 장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11일(현지시간) CBC 방송에 따르면 스테판 디옹 캐나다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중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의장 부근 북도에서 인사를 나누는 등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짐.
- 이 접촉에서 디옹 장관은 지난해 말 북한에서 국가전복 활동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인 출신 캐나다 선교사 임현수(62) 목사의 석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밝혔다.

■ **코스타리카 대통령, 대북제재 행정명령 며칠내 내릴것(연합뉴스)**

-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리베라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며칠 내로 내릴 예정”이라고 밝힘.
-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 중인 솔리스 대통령은 서울 힐튼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결의가 금지하는) 어떤 물질을 운송하는데도 우리의 바다와 하늘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솔리스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취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매우 엄격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함.

2016. 10. 13.

■ **탄자니아, 자국 깃발 단 北선박 13척 등록 취소(연합뉴스)**

- 아프리카의 탄자니아가 자국 선박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 13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탄자니아 잔지바르해사국의 압둘라 후세인 국장은 탄자니아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가 6월에 시작돼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차원에서 북한과 연관된 어떤 선박도 탄자니아 깃발을 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함.
- 후세인 국장은 선박 등록 절차를 엄격히 해 앞으로 북한 선박이 자국에 등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임.

2016. 10. 14.

■ **벨라루스, 대북제재 결의 위반 계좌 동결...첫 사례(연합뉴스)**

- 벨라루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자국 내 은행계좌를 동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결의 2270호가 시행된 이후 은행계좌 동결 조치가 확인된 첫 사례라고 방송은 전함.
- 드미트리 미로치크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은 VOA와 통화에서 자국 은행 한 곳이 해당 계좌의 외부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힘. 다만 그는 문제의 계좌를 보유한 예금주의 국적 등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거부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10. 8.

■ 北, '풍계·동창리·무수단' 동시도발 징후...뭘 노리나(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도발 징후를 보여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림.
- 지난달 핵실험을 감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장거리미사일(로켓)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 원산 지역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기지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새로운 대북제재가 나오면 강력한 도발을 벌이겠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군불 떼기’에 나선 측면이 있다”며 “유엔 제재 결의 이전이고 수해복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강도보다 스킨드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저강도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분석함.

2016. 10. 9.

■ 美38노스, 北로켓발사장 주변서도 활동...엔진시험장 철저 은폐(연합뉴스)

-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로켓발사장에서도 최근 들어 활동이 있었고, 특히 로켓엔진 시험장에는 구조물을 설치해 그 아래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8일(이하 현지시간) 밝힘.
- 38노스는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대한 잭 류 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발사대 옆의 지지용 철탑 옆에 운반용 상자도 보이는 물체가 나타났고, 연료와 산화제 보관용 건물 옆에서는 차량들이 포착됐다”고 전함.
- 국내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새로운 도발 수단으로 쓸 수 있음을 시사하는 언급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美랜드연구소, 北 2020년 핵무기 50~100개 보유(연합뉴스)

-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차기 미 정부 집권 기간인 2020년까지 핵무기를 50~100개 보유할 수 있으며, 2020~2025년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랜드연구소는 8일(현지시간) ‘차기 정부 지도자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공개된 가장 최근 자료는 북한이 13~21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하

-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2020년까지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북한은 태평양 넘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추정치로는 2020~2025년 장거리, 이동식, 잠수함 발사 형태로 다수의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2016. 10. 14.

■ **조원진, 北에 소규모 인공지진 연평균 42회…매년 증가(연합뉴스)**

- 북한에서 규모 3.0 이하 소규모 인공지진이 연평균 42차례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횟수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14일 밝힘.
- 조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3.0 이하 인공지진은 총 253차례다. 2010년 20차례이던 게 지난해는 67차례로 늘었음.
- 지역별로는 평양시가 67차례로 가장 많고 ▲황해북도 46차례 ▲강원도 40차례 ▲평안남도 35차례 ▲황해남도 28차례 ▲함경남도 20차례 ▲평안북도 14차례 ▲개성시 3차례 순임. 특히 함경남도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는 인공지진이 관측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8차례나 발생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0.8		주유엔 美대사 방한...“대북 추가조치 찾고 있어”(연합뉴스)	
	10.9	황총리, 한미공조로 강력대응...파워 대사, 대북제재 긴밀협력(연합뉴스)	파워 美대사, 방한 사흘째...외교·통일 장관 잇따라 면담(연합뉴스)	
	10.10	“북한 도발 대응” 한·미 해군 ‘2016 불굴의 의지’ 훈련(국방부)		美백악관 “사드, 오직 北 핵·미사일 위협 방어에 집중”(연합뉴스)
		윤병세, 훨씬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검토...파워 대사 면담(연합뉴스)		
		윤병세, ‘클린턴 외교책사’ 접견...한미 긴밀 공조해야(연합뉴스)		
	10.11	롱펀치 날려 핵시설 무력화한다...한미 해군 훈련양상 급변(연합뉴스)		클린턴 외교책사 서면, 북핵 끝내려면 모든 옵션 동원해야(연합뉴스)
		이순진 합참의장 미국 방문...北 핵·미사일 대응방안 논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0.10	해수부, 중국 정부와 불법어선 강력차별 방안 논의(연합뉴스)	중국 ‘더어선 해경정 침몰 공격에 “이성적 처리” 요청(연합뉴스)	
	10.11	정부, 자국어민의 韓공권력 도전 직시하라...中에 직설경고(연합뉴스)		

	10.12		중국 '중어선 해경정 사태' 맞대응...한국 집행권 남용 안돼(연합뉴스)
	10.13	윤병세, 중어민 범죄인 인도요청 문제 관계부처와 상의(연합뉴스) 외교부, 中총영사에 "해경선 공격 어민 처벌하라"...3차 요구(연합뉴스)	中관영매체, 한국이 중어선에 함포 쏘면 보복 초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0.11		日언론 '울릉도 해병대 배치'에 "영도문제 일본 견제 의도"(연합뉴스)
		한-일 경제교류회의 개최...헬스케어 협력 강화(연합뉴스)	
	10.3	윤병세, 브란트는 폴란드서 무릎...아베 '털끝말안' 우회 비판(연합뉴스)	
	10.4	한민구 "한일정보협정, 자위대 한반도 진출 전제안해"(연합뉴스) 윤병세, 한일정보협정 필요성에 공감대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10.11		러 국방부, 사드 배치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장애물(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0.8		中美채널, 美 혼탁 대선 겨냥 “민주주의 가르칠 자격 있나” 비난(연합뉴스)	
	10.13	러셀 차관보, 대북결의 위반 중국기업 미국이 처벌할 수도(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0.8	美 국방부 ‘일본 핵전쟁 보고서’ “10년내 핵무장할 수도”(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0.8	美 “러시아, 美 대선 개입 위해 민주당 해킹”...러, 강력 부인(연합뉴스) 케리 美 국무, 러시아 알레포 공격은 전쟁범죄...조사 촉구(연합뉴스)		
	10.10		러 외무장관, 냉전때보다 전세계 불안... 美가 핵확산 부추긴 탓(연합뉴스)	
	10.12		러시아 “美 글로벌 MD, 러中 겨냥한 것...전략 우위 노려”(연합뉴스)	
			백악관, 러시아 해킹공격에 상응하는 대응 할 것(연합뉴스)	
			러, 美에 스노든 인도할 도덕적·법적 근거 없어(연합뉴스)	
	10.13		美러 15일 시리아사태 논의...16일 런던서 시리아국제회의(연합뉴스)	
10.4	美하원의원 22명, 미 정부에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 채택 촉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0.10	日, 센카쿠서 조업 中 어선 단속용 순시선 9척 배치한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10.11	중국-러시아, 사드 겨냥해 내년 미사일 방어 공동훈련(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10.10	日, 러시아 북극해 대규모 가스전 개발 참여 검토(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10. 8.

■ 주유엔 美대사 방한...“대북 추가조치 찾고 있어”(연합뉴스)

- 북한의 지난달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가운데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8일 한국을 방문함.
- 파워 대사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이 개선되고 있는 (우려)상황이 내가 방한한 첫째 이유”라며 “북한은 (핵도발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함.
-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방한 자체는 물론 관문점 방문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됨. 그는 관문점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임.

2016. 10. 9.

■ 황총리, 한미공조로 강력대응...파워 대사, 대북제재 긴밀협력(연합뉴스)

- 황교안 국무총리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 대사를 접견하고 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황 총리는 이날 접견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견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총리실은 전함.
- 이날 접견에는 주유엔 대사로 내정된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등이 배석함.

■ 파워 美대사, 방한 사흘째...외교·통일장관 잇따라 면담(연합뉴스)

-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0일 탈북자 관련 대안학교 방문과 외교·통일 수장 면담 등으로 사흘째 방한 일정을 소화함.
- 파워 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탈북자 대안학교인 다음학교를 방문할 예정임. 전날 탈북민 정착교육 기관인 경기도 안성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방문에 이어 북한 인권을 매개로 한 대북 압박행보로 풀이됨.
- 파워 대사는 오후에는 홍용표 통일부장관을 만나는데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을 잇따라 면담할 예정임.

2016. 10. 10.

■ **“북한 도발 대응” 한·미 해군 ‘2016 불굴의 의지’ 훈련(국방부)**

- 한·미 양국 해군이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투입해 한반도 전 해역에서 ‘2016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2016)’ 훈련을 실시함.
- 해군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잇단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훈련에는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 등 한국 해군함정 40여척,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Ronald Reagan, CVN)과 이지스순양함(CG) 등 미국 해군함정 7척, P-3/8 해상초계기·FA-18 등 양국 해군의 항공기, 한국 공군 전술기,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 등이 참가함.

■ **美백악관 “사드, 오직 北 핵·미사일 위협 방어에 집중”(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 국민이 낸 인터넷 청원과 관련해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와 사드 배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백악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청원 ‘위더피플(We the People)’팀은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회신문에서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집중될 것이며,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양국의 공동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답변함.
- 이어 “미국은 우리의 동맹 한국과 주한미군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정부와 사드 배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 결정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석같은 약속을 담고 있다”고 강조함.

■ **윤병세, 훨씬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검토…파워 대사 면담(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취했던 독자제재에 이어 훨씬 더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한미간 협의에 추가해 EU(유럽연합)나 일본도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독자제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함.

- 이날 면담 초반 윤 장관은 방한 기간 파워 대사의 행보에 대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고, 파워 대사는 “많은 것을 배웠다. 북한 문제의 인간적 측면(human side)을 봤다”고 화답함. 두 사람은 만찬을 함께 하며 협의를 이어감.

■ 윤병세, ‘클린턴 외교책사’ 접견…한미 긴밀 공조해야(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외교 책사’로 꼽히는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윤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셔먼 전 차관과 30분가량 면담함.
-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최근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며 “조만간 개최될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2016. 10. 11.

■ 뽕편치 날려 핵시설 무력화한다…한미 해군 훈련양상 급변(연합뉴스)

-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 양상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함정에서 지상 전락시설을 무력화하는 함대지(艦對地) 정밀타격 연습으로 급변함.
- 그간 함대함·함대공 위주였던 연합 해상훈련 양상이 급변한 것은 지상의 대량응징보복(KMPPR) 개념을 해상에도 적용, 함정의 원거리 정밀유도무기로 소나기식 ‘뽕편치’를 날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됨.
- 군 관계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이 공개한 3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 작전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백해지면 한국군 단독 또는 미군과 연합으로 실행할 것”이라며 “해상에서의 한미 대지 정밀타격훈련도 이런 작전 개념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 이순진 합참의장 미국 방문…北 핵·미사일 대응방안 논의(연합뉴스)

- 이순진 합참의장이 11일 미국을 방문해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함.
- 합동참모본부는 “이 의장이 던포드 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오늘부터 이달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힘.
- 이 의장은 오는 13일 던포드 의장을 만나 제41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M)를 열어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임.

■ **클린턴 외교책사 서면, 북핵 끝내려면 모든 옵션 동원해야(연합뉴스)**

- 웬디 서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은 11일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경제제재 조치만으로 하기보다는 모든 가능한 옵션을 갖고 해야한다”고 밝힘.
- 서먼 전 미국 정무차관은 이날 매일경제 주최로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지식 포럼 강연에서 “정보, 외교, 군사, 경제제재 등 우리가 가진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야 북한의 위협에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이어 “북한이 차기 미 대통령(또는 당선자)에 대해 내년 초에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최근 국경일(당창건일·10월10일)에 도발하지 않았다고 해도 곧 (도발 움직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우려함.

나. 한·중 관계

2016. 10. 10.

■ **해수부, 중국 정부와 불법어선 강력처벌 방안 논의(연합뉴스)**

- 지난 7일 해경의 고속단정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과 불법어선을 강력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0일 밝힘.
-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 수가 지난해보다 줄긴 줄었다”며 “다만 언론에서 표현했듯이 진화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단속 방해 행위와 관련, 정당한 권한을 갖고 공무집행을 하는 우리 지도 단속 공무원들의 안위를 저해할 수 있는 쇠창살 등 불법 조업시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한중 공동어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어선 척수와 어획 할당량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음. 올해는 현재까지 본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회담이 두 차례 열렸지만, 입어 척수 규모 등을 놓고 양측의 견해가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현재 양측은 3차 준비회담 시기를 조율 중임.

■ 중국 ‘중어선 해경정 침몰 공격’에 “이성적 처리” 요청(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지난 7일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과 충돌해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함.
- 특히, 중국은 양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해경정 침몰사건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하길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침.
- 정황(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우리는 현재 유관 부분을 통해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양자 관계와 지역 안정의 대국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유관 문제를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힘.

2016. 10. 11.

■ 정부, 자국어민의 韓公권력 도전 직시하라…중에 직설경고(연합뉴스)

- 외교부가 지난 7일 중국 어선의 충돌로 발생한 한국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에 ‘돌직구’를 던짐.
- 한때 밀월기를 구가한 한중관계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인해 긴장 국면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해 ‘할 말은 분명히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임.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수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의 우리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함.

2016. 10. 12.

■ 중국 ‘중어선 해경정 사태’ 맞대응…한국 집행권 남용 안돼(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지난 7일 자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월권 행위라며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섬.
-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했던 것과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는 최근 한국이 중국 내 불법 어선에 대해 함포 사용을 허용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다급해진 중국도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임.
- 정황(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자 “오늘 확인을 했더니 한국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함.

2016. 10. 13.

■ **윤병세, 中어민 범죄인 인도요청 문제 관계부처와 상의(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중국 어민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필요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힘.
- 윤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기본적으로 법무부 관할 사안이지만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를 더 하겠다”고 말함.
- 윤 장관은 “가해 선박과 선원에 대해 신속한 수사, 검거, 처벌이 이뤄지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그것을 요청하고 실효적 결과를 얻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힘.

■ **외교부, 中총영사에 “해경선 공격 어민 처벌하라”…3차 요구(연합뉴스)**

- 외교부는 13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중국 어선 선원에 대한 처벌을 거듭 요구함.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오늘 주한 중국총영사를 불러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며 “(가해 어민에 대한) 수사, 검거, 처벌을 요청했다”고 말함.
-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뒤 중국 정부가 12일 “한국 정부 입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임에 따라 양국 정부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됨.

■ **中관영매체, 한국이 中어선에 함포 쏘면 보복 초래(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 어선의 한국 해경정 고의 침몰 사건과 관련해 한국 해경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함포를 사용할 경우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 다만, 이 매체는 한국 해경의 함포 사용은 위협용으로 실제 발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외교적 해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

-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3일 한국 해경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함포를 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지와 진짜 쏠 것인지를 분석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함.

다. 한·일 관계

2016. 10. 11.

■ **日언론, ‘울릉도 해병대 배치’에 “영토문제 일본 견제 의도”(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한국군이 2018년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해병대 사령부의 11일 국회 업무보고에 대해 “영토문제에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주장함.
- 교도통신은 해병대사령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전한 뒤 “울릉도는 독도에서 약 90km 떨어져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가 주목적으로 보이지만, 영토문제에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 통신은 “울릉도 배치 부대의 작전 영역에는 독도도 포함되며, 독도에 외부세력의 침공 조짐을 보이면 이 부대가 독도에 상륙해 방어한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한 뒤 “실제 부대가 배치돼 독도와 주변 해역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한일간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 **한·일 경제교류회의 개최…헬스케어 협력 강화(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 일본 후쿠오카(福岡) 현에서 규슈(九州) 지역과의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한·일(규슈) 경제교류회의’를 연다고 11일 밝혔.
- 한·일 경제교류회의는 양국 간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과 경제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1993년 일본을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여는 행사임.
- 올해 회의에서는 ‘한일 의료산업의 협력과 미래’를 주제로 양국의 헬스케어 산업 현황과 제휴 사례, 앞으로의 협력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함.

2016. 10. 13.

■ **윤병세, 브란트는 폴란드서 무릎…아베 ‘탈골발언’ 우회 비판(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무릎사죄'를 거론하며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이른바 '감성 조치'를 우회적으로 촉구함.

-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쓸 생각이 “털끝만치도 없다”는 아베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질문받자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구체적 표현에 대해서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답함.
- 그런 뒤 윤 장관은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국가가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해당되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말함.
- 윤 장관은 후속 질의 과정에서 아베의 ‘털끝 발언’에 대해 재차 질문받자 “표현 자체는 (한국)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표현”이라며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지만 감성적 측면에서 일본 측이 유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임.

2016. 10. 14.

■ **한민구 “한일정보협정, 자위대 한반도 진출 전제안해”(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반도 진출을 전제하는 협정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고 단언함.
-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힘.
- 한 장관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본이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이 협의하자고 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고 전망함.

■ **윤병세, 한일정보협정 필요성에 공감대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와 관련해 “일반론적으로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과거보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으로 본다”고 밝힘.
-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양석 의원이 협정 체결 필요성을 거듭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함.
- 또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해온 말씀대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임.

라. 한·러 관계

2016. 10. 11.

■ 러 국방부, 사드 배치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장애물(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은 1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상산 안보포럼’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과도한 대응에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힘.
- 러시아 외무부의 미하일 울리아노프 비확산·군비통제국 국장은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드 한국 배치는 러시아의 이익을 건드리는 것이며 러시아는 이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10. 8.

■ 中매체들, 美 혼탁 대선 겨냥 “민주주의 가르칠 자격 있냐” 비난(연합뉴스)

- 국경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미국의 혼탁한 대통령 선거 국면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며 비난을 퍼붓고 나섬.
- 이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당 독재라며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자극해온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선 후보 간 비난이 난무하는 미국 대선이 공격하기에 좋은 소재이기 때문임.
-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이라며 공개 입장을 표명하지 않지만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주요국의 현안에 대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음.

2016. 10. 13.

■ 러셀 차관보, 대북결의 위반 중국기업 미국이 처벌할 수도(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자국 기업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그 기업들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고 12일(현지시간) 강조함.

- 러셀 차관보는 “중국 정부가 결의를 위반한 북한 기업과 북한에 협력한 중국 기업에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다른 주체가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말함.
- 그는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미국은 (올해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2270호나 미국 당국의 자체 법규를 근거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함.

나. 미·일 관계

2016. 10. 8.

■ 미국방부 ‘일본 핵전쟁 보고서’ “10년내 핵무장할 수도”(연합뉴스)

-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10년 안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부의 외부용역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 보수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이 7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매체에 따르면 국방부 총괄평가국(ONA)이 지원한 ‘일본 핵전쟁 연구 보고서’는 “일본의 진보한 핵 능력 기반과 우주발사대, 크루즈미사일, 잠수함 등에 근거할 때 일본 정부가 10년 안에 스스로 핵 무장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함.
-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핵 전력을 현대화하고 북한이 핵 전력 및 운반체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반면, 미국의 핵 전력 노후로 안보 보장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함.

다. 미·러 관계

2016. 10. 8.

■ 美 “러시아, 美 대선 개입 위해 민주당 해킹”...러, 강력 부인(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민주당 이메일 해킹 사건의 배후를 러시아로 공식 지목함.
- 이 사안을 수사해온 미 국토안보부와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들 절도와 폭로는 미 대선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비난함.
- 성명은 해킹 자료를 온라인에 띄운 위키리크스, 구시퍼 2.0 등과 해당 사이트 등을 거론하며 “러시아가 지시한 행위의 방법과 동기 면에서 일관된다”며 “이들 행위의 범위와 민감성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최고위 관리만 이러한 행동을 승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밝힘.

■ **케리 美국무, 라-시리아 알레포 공격은 전쟁범죄…조사 촉구(연합뉴스)**

- 존 케리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의 알레포 공격을 ‘전쟁범죄’로 공식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조사 필요성을 공개 제기함.
- 케리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과 회담을 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힘.
- 케리 장관은 “시리아 정권이 지난밤에 또다시 (알레포의) 병원을 공격해 20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했다”면서 “러시아와 시리아 정권은 자신들이 왜 병원과 의료시설, 그리고 이동과 여성들을 계속 공격하는지에 대해 단순한 해명 이상의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함.

2016. 10. 10.

■ **러 외무장관, 냉전때보다 전세계 불안…美가 핵확산 부추긴 탓(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현재가 냉전 시대보다 불안정하다며 미국의 타국 내정 간섭이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비난함.
- 라브로프 장관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 주말 TV 프로그램 ‘보스크레스노예 브레냐’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냉전 시대보다) 덜 편안하거나 안정적이다”라며 “왜냐하면 양극 체제였을 때는 소련과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라는 엄격하지만, 안정적인 대립이 유지됐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함.
- 그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했던 냉전 때는 국제질서가 더 명확했다며 베트남과 한국, 모잠비크, 앙골라 등에서의 분쟁과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주변부 문제였을 뿐이라고 강조함.

2016. 10. 12.

■ **러시아 “美 글로벌 MD, 라-중 겨냥한 것…전략 우위 노려”(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MD)망 구축 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섬.
- 미국이 이란과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 등에 구축하고 있는 MD 시스템이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전략적 균형 훼손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제1부국장 빅토르 포즈니히르는

1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상산 안보포럼’에서 한 연설에서 MD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미국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함.

■ **백악관, 러시아 해킹공격에 상응하는 대응 할 것(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민주당 이메일 해킹 사건 등의 배후로 지목되는 러시아에 ‘상응하는 대응’을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과 AFP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민주당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침착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대응은 (러시아의 대선개입에) 상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사전에 공표되지는 않을 것 같다. (대응의)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 **러, 美에 스노든 인도할 도덕적·법적 근거 없어(연합뉴스)**

- 러시아는 자국에 임시망명 중인 전(前) 미국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을 미 당국에 넘겨줄 수 없다고 밝힘.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는 11일(현지시간) 미 존스홉킨스 대학 ‘유망국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스노든을 미국 사법 당국에 인도할 도덕적, 법적 권리가 없다”고 말함.
-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와 미국 간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고 상기시킴.

2016. 10. 13.

■ **美러 15일 시리아사태 논의…16일 런던서 시리아국제회의(연합뉴스)**

-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오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12일 밝힘.
-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장관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기로 했다고 말함.
- 이번 회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대표도 참석한다고 러시아 외교부는 덧붙임.

2016. 10. 14.

■ **美하원의원 22명, 미 정부에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 채택 촉구(연합뉴스)**

- 시리아 내전 해법 등을 놓고 미국이 러시아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미 하원의원들

-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보냄.
-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비버라 리·케이스 엘리슨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 22명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러시아와의 긴장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과국적인 오판과 이에 따른 전면적인 핵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라”고 촉구함.
 - 앞서 지난 7월 20일에도 애덤 스미스 의원 등 중진의원 5명도 핵무기 선제 불사용과 경보 즉시 발사(launch-on-warning) 핵 준비태세를 철폐할 것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디펜스뉴스는 전함.

라. 중·일 관계

2016. 10. 10.

■ 日, 센카쿠서 조업 중어선 단속용 순시선 9척 배치한다(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자 다음 달부터 2018년까지 순시선 9척을 잇달아 배치한다고 NHK가 10일 전함.
-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 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수가 지난해 99척에서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 말 현재 135척으로 증가, 전체 어선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해상보안청은 중국 어선에 대응하고자 2014년부터 건조 중인 순시선 3척 중 1척을 다음 달 하순 오키나와(沖縄)현 미야코지마(宮古島)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례로 현장에 순시선을 파견하기로 함.

마. 중·러 관계

2016. 10. 11.

■ 중국·러시아, 사드 겨냥해 내년 미사일 방어 공동훈련(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11일 한미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거둬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에 대응해 내년에 미사일 방어(MD) 연합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함.
- 관찰자망(觀察者網)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러 양국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 국방안보 포럼인 제7회 상산(香山)포럼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공개함.
- 내년도 훈련은 지난 5월 러시아에서 진행된 ‘미사일 방어 컴퓨터 훈련’에 이어 2번째로 열리는 것이지만 지난 7월 한미의 사드 공식 배치 결정 이후로는 처음 진행되는 것임.

바. 일·러 관계

2016. 10. 10.

■ 日, 러시아 북극해 대규모 가스전 개발 참여 검토(연합뉴스)

- 러시아와 영토 반환 협상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러시아 북극해의 대규모 가스전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함.
- 11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러시아 최대 민간 가스생산기업 ‘노바테크’가 북극해에서 진행할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에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이 자금을 지원하고 자국 대기업이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 측 기업은 이번 사업 참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임.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0.9	중, 북 주민 탈북차단에 적극적(자유아시아방송) 北에 정보 넣어 민주화 요구하는 주민들 만들어야(연합뉴스)
	10.10	北 2000년대 들어 자유권 침해 심각...북한인권정보센터 분석(연합뉴스) 칠레서 중남미 최초 북한인권단체 결성(연합뉴스)
	10.11	한미, 北인권 유엔총회 결의 추진...안보리서도 논의(연합뉴스) 北 수해지역 탈북자 은신처 사라질 위기(연합뉴스)
	10.12	유엔총회, 3년 연속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추진(연합뉴스)
	10.13	'北 인권문제 토론회' 통일연구원 사이오 인권포럼 개막(연합뉴스) 백악관, 北인권유린 심각히 우려...잇단 탈북사태의 원인(연합뉴스) EU "北인권결의안, 이달 내 유엔 제3위원회 상정"(연합뉴스)
		10.8
북한인권 내부동향	10.13	北, 태영호 망명후 中무역일꾼 파견지 이탈 금지(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10.11	정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첫 개최...北 인권상황 방치 안돼(연합뉴스) 차대통령, 탈북민은 통일시험장...충분히 수용할 체계 갖춰야(연합뉴스)
	10.12	통일부,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방향 다음달 발표(연합뉴스) 이정훈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장 받고 활동(연합뉴스)
		10.13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0.12	[단독]北 권력기관 보위부 국장도 탈북...“평양민심 뜨겁다” 진술(연합뉴스)
대북지원	10.10	지난달 美 민간대표단 방북...인도적 문제 논의(연합뉴스) 올해 국제적십자사연맹 통한 대북 지원 전무(연합뉴스)
	10.12	美연구소, 北 기아위험 세계 21위(연합뉴스) 북민협, 국제적십자사에 北 수해지원금 2억원 전달(연합뉴스)
		10.14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10. 9.

■ 중, 북 주민 탈북차단에 적극적(자유아시아방송)

- 요즘 들어 북한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고 있음. 국경연선의 집결소와 해당 시설들에 탈북하다 잡혀 들어온 수용인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 당국의 탈북자 검거 및 북송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힘.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6일 “최근 들어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자의 수가 대폭 늘어 수용시설이 넘치는 실정”라며 “국경에 국가보위부가 내려와 삼엄한 단속을 벌여도 탈북하려는 행렬은 여전히 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함.
- 소식통은 또 “최근 인민반 주민들에게 공개한 보안서 통보서에 따르면 실사 국경을 넘어간다 해도 중국 땅에서 100% 잡혀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며 엄포를 놓고 있다”며 “중국공안이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잡아들이는 데에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함.

2016. 10. 10.

■ 北에 정보 넣어 민주화 요구하는 주민들 만들어야(연합뉴스)

-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의 탈북자 김형수 씨는 9일(현지시간) “북한에 정보를 많이 전달해서 북한 주민들을 투쟁하며 민주화도 요구할 수 있는 현대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독일에서 열리는 제2회 ‘북한인권 독일영화제’를 계기로 베를린을 찾은 김 씨는 이날 시내 극장에서 한 강연에서 온갖 정보가 차단되고 수령 우상화로 마비된 북한사회의 실상을 전하며 이같이 말함.
-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총장)와 함께 독일을 방문한 김형수 씨는 같은 행사가 열리는 하이델베르크대학과 트리어대학에서도 각각 10, 11일에 강연할 계획임.

■ 北 2000년대 들어 자유권 침해 심각..북한인권정보센터 분석(연합뉴스)

- 1990년대와 비교해 2000년대 북한에서 피의자·구금자의 권리를 비롯한 자유권 침해가 급증했다는 민간단체의 분석이 나왔음.

-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부설기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 인권침해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 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북한인권백서 발간 10주년 기념행사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 북한인권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칠레서 중남미 최초 북한인권단체 결성(연합뉴스)

- 칠레의 에스테파니아 오레야나 타이보(Estefania Orellana Taibo) 변호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인권단체 ‘자유로, 하나로(Por La Libertad, Por La Unification)’의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변호사 네 명, 전문번역가 세 명, 공무원 한 명 등 창립회원을 주축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동참하려는 30여 명의 현지인들이 칠레인에게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오레야나 씨는 설명함. 이 단체는 북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칠레 정부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 이 단체 회원들은 지난 7일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수감된 바 있는 칠레인 에두아르도 무리쥬 우가르테(Eduardo Murillo Ugarte) 씨와 만나 자문을 구하기도 함. 무리쥬 씨는 1960년대 북한에 침술을 공부하러 갔다 북한 당국을 비판했다며 수감되었고 지난 4월 자신의 비망록을 스페인어 즉 에스빠냐어에서 영어로 번역해 출간한 바 있음.

2016. 10. 11.

■ 한미, 北인권 유엔총회 결의 추진...안보리서도 논의(연합뉴스)

- 한미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총회 결의를 추진하고, 안보리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를 계속하기로 함.
- 외교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 사이의 전날 면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이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임.

■ 北 수해지역 탈북자 은신처 사라질 위기(연합뉴스)

- 지난 8월 태풍 '라이언록'으로 홍수피해를 본 함경북도 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면서 '탈북 은신처'로 활용됐던 마을들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한국의 대북 민간단체 대표는 RFA에 “회령시와 무산군, 온성군 등 두만강 인근의 낮은 지대에 있던 주택들이 홍수피해를 보게 되자 높은 지대로 집을 옮겨야 한다는 북한 당국의 지시가 내려짐에 따라 많은 탈북 은신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주요 탈북 통로(루트)에 철조망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탈북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RFA는 전함.

2016. 10. 12.

■ 유엔총회, 3년 연속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추진(연합뉴스)

-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올해도 추진됨.
- 11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유린 관련 책임자를 찾아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공동스폰서로 참가할 회원국에 돌림.
- 올해에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에 맞춰 안보리가 안전으로 다룰지를 검토하게 됨.

2016. 10. 13.

■ ‘北 인권문제 토론회’ 통일연구원 사이오 인권포럼 개막(연합뉴스)

- 북한 인권법이 발효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유엔의 전·현직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 포럼이 열림.
- 통일연구원은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6차 ‘사이오 인권포럼’을 개최함. ‘사이오’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장소인 프랑스 파리의 사이오 궁에서 따온 것임.
- 이번 포럼에서는 ‘북한인권법 발효와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주제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제에서 더욱 악화한 북한 인권 실태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춤.

■ 백악관, 北인권유린 심각히 우려…잇단 탈북사태의 원인(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런 것이 바로 잇따른 탈북사태의 원인이라고 밝힘.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함.
- 그는 대북 인권제재와 관련해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명백한 인권유린은 단지 미국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우선시하는 모든 나라에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밝힘.

■ EU “북인권결의안, 이달 내 유엔 제3위원회 상정”(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이달 내에 유엔 제3위원회에 상정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유엔본부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공보담당관은 RFA에 “공식적인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일본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공동제안국들과 다른 회원국들이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
- 초안에는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짐.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10. 8.

■ 北, 미국인 대학생 스네든 납치 의혹 또 부인(연합뉴스)

- 북한이 12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든의 납치 의혹을 또다시 부인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미국인 대학생 스네든이 다른 나라의 고산지대를 여행하다가 행불(행방불명)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는 이미 그가 여행 도중 강에 빠져 죽었을 수 있다고 미국 국무성과 가족 측에 공식 통보하였다”며 “그럼에도 미국이 이제 와서 터무니없이 북조선(북한)에 의한 미국인 납치설을 떠들어대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총과산으로 서산낙일(힘이 기울어 멸망하게 된 판국)의 운명에 처한 오바마가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극대화하여 우리의 국제적 영상에 먹칠하기 위해 꾸며낸 모략에 불과하다”고 비난함.

2016. 10. 13.

■ **北, 태영호 망명후 中무역일꾼 파견지 이탈 금지(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태영호 주(駐)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의 한국 망명 이후 중국에 나가 있는 무역 일꾼들이 파견 지역을 임의로 벗어나지 말도록 통제를 강화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RFA에 “북한 당국이 지금까지는 일부 주재원들이 원래 파견 지역을 벗어나 무역 활동을 하기 좋은 곳에서 일하는 것을 묵인했다”며 태 공사가 망명한 후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은 이미 파견 지역을 벗어나 활동하는 주재원들에게는 원래 지정된 파견지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10. 11.

■ **정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첫 개최…北 인권상황 방치 안돼(연합뉴스)**

- 정부는 11일 오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김형석 통일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가한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함.
-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등 북한 인권 관련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됨.
- 주요기능은 ▲ 북한 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 북한 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 ▲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 북한 인권 현안 협의 등임.

■ **朴대통령, 탈북민은 통일시험장…충분히 수용할 체계 갖춰야(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밝힘.
-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함.

-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 탈북도 증가하는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평가함.

2016. 10. 12.

■ **통일부,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방향 다음달 발표(연합뉴스)**

- 통일부는 12일 탈북민 3만명 돌파를 계기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 방향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이면 탈북민 3만명 시대가 될 것”이라며 “3만명 돌파에 맞춰 기존의 탈북민 정책 방향을 ‘사회통합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말함.
- 정 대변인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체계를 효율화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에 탈북민 지원정책 개선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밝힘.

■ **이정훈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장 받고 활동(연합뉴스)**

-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을 도모할 이정훈(55)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12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함.
- 이 대사는 앞으로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활동함.
- 임명장 전수식에는 방한 중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마르주키 다르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 등도 참석함.

2016. 10. 13.

■ **윤병세, 해외 북노동자 문제 곧 국제사회서 집중 논의(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앞으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1차적으로 인권 탄압 측면, 두번째로 그들이 번 돈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를 만드는데 전용된다는 측면에서 노동자가 일하는 나라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EU) 등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윤 장관은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라는 큰 틀안에 묶는 총체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10. 12.

■ [단독]北 권력기관 보위부 국장도 탈북…“평양민심 뜨겁다” 진술(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체제’ 보위를 위해 주민 동향감시와 ‘반혁명분자’ 색출 임무를 담당하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 국가안전보위부(성)의 국장급 A씨가 탈북해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12일 알려짐.
-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보위부의 국장급이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며 “평양 민심이 뜨겁다는 진술을 관계기관 면담 과정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평양 민심이 뜨겁다”는 A 씨의 진술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공포통치 때문에 조직적인 저항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통치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됨. 특히 출신 성분이 좋은 엘리트층이 많이 거주하는 평양에서도 김정은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됨.

5. 대북지원

2016. 10. 10.

■ 지난달 美 민간대표단 방북…인도적 문제 논의(연합뉴스)

- 미국의 민간 대표단이 인도주의적인 논의를 위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함. 뉴욕타임스는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이끄는 ‘리처드슨 센터 포 인게이지먼트’(Richardson Center for Global Engagement)의 주관 아래 지난달 민간 차원의 북한 방문이 있었다면서 거의 2년 만에 북한과 미국 대표단의 만남이었다고 7일 보도함.
- 방문단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미국 방문단을 받은 것은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양국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모두 더 많은 접촉을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 신문은 설명함.
-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의 코멘트 요구에 대해 “(이번 방문이) 백악관과 협의가 이뤄진 것이며, 백악관은 이런 인도주의적인 방문을 지원한다”고 밝힘.

2016. 10. 12.

■ **올해 국제적십자사연맹 통한 대북 지원 전무(연합뉴스)**

-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서 올해 들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한 우리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IFRC를 통한 우리의 대북지원은 전무함.
- 통일부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IFRC를 통한 지원이 중단된 데 이어 승인이 필요한 남북 적십자간 교류협력 실적도 현 정부 들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남.

■ **美연구소, 北 기아위험 세계 21위(연합뉴스)**

- 미국의 민간단체인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올해 북한의 기아 상태가 세계에서 21번째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IFPRI는 ‘2016 세계 굶주림 지수(Global Hunger Index)’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0명 중 4명꼴로 건강을 유지할 만큼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험한 식량 부족 상태”라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전함.
- 한편, 함경북도 소식통은 RFA에 “최근 장마당에서 입쌀(백미)은 1kg당 중국 위안화 5원 50전(북한 돈 7천150원)이고 강냉이(옥수수)는 2원 30전(북한 돈 3천 원)을 웃도는 실정”이라며 “9월까지 입쌀 4원 50전(위안화), 강냉이 2원 정도로 안정세를 보이던 식량 값이 갑자기 올랐다”고 설명함.

■ **북민협, 국제적십자사에 北 수해지원금 2억원 전달(연합뉴스)**

- 국내 54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을 돕기 위한 지원금 2억여 원을 국제적십자사에 보냈다고 12일 밝힘.
- 북민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금의 총 규모는 18만7천 달러(2억1천만 원 상당)이며, 국제적십자사와 체결한 공식 약정서에 따라 12일 1차분 1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2차분 8만7천 달러는 오는 18일 이전까지 지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북민협은 이어 “이번 수해지원금은 공식 약정서에도 명시된 것처럼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함.
-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수해 발생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당국에 잘못된 행태와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수해 지원 활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함.

2016. 10. 14.

■ **홍용표, 북한 수해 지원 검토하고 있지 않다(연합뉴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대북 수해지원과 관련해 “수해 관련 사항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인도지원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5차 핵실험 이후 여러 상황이 엄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상황에서 판단할 필요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목소리로, 국민 모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선불리 어떤 상황 예단하거나 핵 포기라는 역사적인 문제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 **WFP 9월 대북 식량지원, 올 들어 최고 수준(미국의소리)**

-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에 분배한 식량 규모가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세계식량계획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실케 버 대변인은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9월 함경북도 수재민을 포함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73만여 명에게 총 2천728t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북도 수재민들이 집 뿐아니라 농작물과 가축 등 모든 것을 잃었으며,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수재민들의 식량 부족이 계속될 것을 우려함.

■ **WHO, 작년 전세계 결핵 사망자 180만명…北 상황 악화(연합뉴스)**

- 지난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180만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새로 1천40만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돼 적절한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13일(현지시간) 밝힘.
- 2015년 북한의 결핵 환자는 14만1천명으로 전년 11만명보다 늘었음. 인구 10만명당 결핵 유병률도 442명에서 561명으로 높아짐.
- 북한의 인구 10만명당 결핵 유병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834명), 레소토(788명) 다음으로 높음.